

● 2023-09-20 ●

# 율촌 입법 위클리

Yulchon Weekly Legislation Report

## 2023-23호 (2023년 9월 20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한가지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보통 매년 9월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8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전체적인 피감기관별 감사일정, 증인채택 및 소환 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간인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국정감사장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일반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증인신청요구서에 예비 증인 명단과 신문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논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의 경향을 보면 주로 사회적 현안 및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이슈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처리 및 보상 현황, 재방방지 대책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질의에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법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방향에 따라서는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정감사는 법, 국가재정, 경제, 교육,문화, 외교, 농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다루는 만큼 쟁점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에는 총 579건의 정책주제가 16개의 상임위별로 나누어 담겼습니다. 이번 입법위클리에서는 많은 현안과 쟁점 중 특히 기업 입장에서 주목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주요 위원회 별로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각 사안은 앞서 언급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과 언론보도, 정부 보도자료, 입법 발의 및 논의 현황, 시민단체 및 협회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I. 국정감사 기본 사항 [바로가기](#)

- ① 국정감사란?
- ② 국정감사 절차
- ③ 국정감사 시기 및 기간
- ④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 II. 2023년 국정감사 주요 쟁점 분석 - 상임위별 [바로가기](#)

- ① 법제사법위원회
- ② 정무위원회
- ③ 기획재정위원회
- ④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⑤ 행정안전위원회
- 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⑦ 보건복지위원회
- ⑧ 환경노동위원회
- ⑨ 국토교통위원회

## I. 국정감사 기본 사항

### ①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한가지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 ② 국정감사 절차

국정감사의 절차는 국정감사 준비단계, 국정감사 실시단계, 국정감사결과 처리단계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단계       | 기본 절차   |
|----------|---|
| 준비 단계    | 1. 국정감사시기 결정  |
|          | 2. 국정감사계획서 작성<br>-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
|          | 3.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
|          | 4. 국정감사사무보조자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 준비   |
|          | 5. 보고·서류제출·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
| 실시 단계    | 1.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  |
|          | 2. 증인 등의 선서   |
|          | 3.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  |
|          | 4. 보고 및 질의 답변<br>- 업무현황보고 청취<br>- 위원의 질의(일괄질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 및 수감기관장 등의 답변<br>-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청취, 검증, 청문회등을 실시 |
|          | 5.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 결과 처리 단계 | 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          | 2. 국정감사결과에 본회의 의결<br>-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요구할 사항 채택 |
|          | 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이송   |
|          | 4.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 내용과 고발   |
|          | 5. 정부 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  |

## ③ 국정감사 시기 및 기간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보통 9월말에서 10월 말 사이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정해졌으나, 세부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별로 대략적인 일정이 일부 나온 곳도 있으나 아직 전체적인 피감기관별 감사일정, 증인채택 및 소환 일정 등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④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국정감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

|                       |   |
|-----------------------|---|
| <b>위원회선정<br/>대상기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li> <li>-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li>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li> </ul> |
| <b>분회의승인<br/>대상기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li> </ul>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외에도 필요한 경우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민간인은 상임위원회로부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예의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일반 증인 출석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증인신청요구서에 예비 증인 명단과 신문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사전 논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의 경향을 보면 주로 사회적 현안 및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이슈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처리 및 보상 현황, 재방방지 대책 등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질의에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법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 방향에 따라서는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II. 2023년 국정감사 주요 쟁점 분석

국정감사는 법, 국가재정, 경제, 교육, 문화, 외교, 농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다루는 만큼 쟁점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에는 총 579건의 정책주제가 16개의 상임위별로 나누어 담겼습니다.

이번 입법위클리에서는 많은 현안과 쟁점 중 특히 기업 입장에서 주목되는 사안을 선별하여 주요 위원회 별로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각 사안은 앞서 언급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집과 언론보도, 정부 보도자료, 입법 발의 및 논의 현황, 시민단체 및 협회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①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리걸테크,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b>리걸테크 기업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법무부는 2021년 9월 출범한 법무부 리걸테크 TF의 운영 성과</li><li>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 조율 방안</li></ul>  | <b>법무부</b> |
| <b>전세사기 예방 및 사회초년생 보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023. 4. 18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및 실효성</li><li>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추가된 것에 그쳐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임차인들이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li></ul> | <b>법무부</b> |

## ② 정무위원회

**키워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인공지능, 자동화된 결정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 대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li> <li>• 최근 1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대형 횡령 사고가 발행한 B 은행</li> <li>• 증권대행 업무를 하는 직원 17명 중 10명이 상장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K은행</li> <li>• 실적 압박에 직원들이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D은행</li> <li>• 100억원대 배임사건 발생한 D카드사</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과도한 A페이 수수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카드사의 높은 수수료 지급 사유 (A페이 도입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수료)</li> <li>• 시장조사기관 전망에 따르면 A페이가 간편결제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할 경우 H카드사의 A페이 수수료는 하루에만 약 100억원으로 추정</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카드사 및 대주주</p> |
| <p><b>K은행 정부 외압 행사 논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으로 본점 이전을 추진 중인 K은행의 외압여부 논란</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가계부채 위험요소 및 대처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 (2022년 4분기말 기준)</li> <li>•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 74%,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31%로 전년 동월 대비 약 0.14%p 상승 (2023년 1분기 기준)</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및 특혜 의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검사 결과와 유력인사 특혜성 환매 의혹</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은행권 경쟁촉진 추진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 지급</li> <li>• 5대은행 중심의 독과점 폐해 해소 및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 방안</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부동산PF 대출 동향과 대응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대출건전성 관련 지표 악화</li> <li>• 업권별 또는 사업장별 부동산PF 부실 위험을 지속 점검 방안 및 부동산PF 부실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방안</li> </ul>   | <p>금융위원회<br/>국토교통부</p>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4월 24일 프랑스계 증권사인 SG(Societe Generale)에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이 집중되었고, 해당 종목의 주가 폭락</li> <li>• 이와 관련하여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으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올린 다음,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금융회사 CEO 선임절차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CEO들의 셀프연임·장기집권 행태</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금융기관</p> |
| <p><b>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2월 6일 토큰 증권(Security Token) 가이드라인을 발표</li> <li>• 그러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 (토큰 증권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권한, 분산장부의 요건과 법적 효력, 전자등록기관의 권한과 책임, 토큰 증권의 권리 이전·행사 규정 방식, 발행·상장 과정 및 절차 등)</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기업</p>   |
| <p><b>디파이 산업 규제 방안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파이</b>: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 전통적 금융서비스(예금, 적금, 교환, 결제, 대출, 투자,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를 가상자산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금융시스템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li> <li>•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서비스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여 다양한 융합 서비스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금융기관에 지불하던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사고(해킹,계정 탈취 등) 및 운영주체의 사익 추구(불완전한 탈중앙화), 취약한 이용자 보호 등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디파이에 대한 규제 요구가 커지고 있음</li> <li>• 반면 금융당국은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li> </ul> | <p>금융위원회<br/>관련 기업</p>   |
| <p><b>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계속 진화하며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특히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에게 매우 취약</li> <li>•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예방 방안</li> </ul>   | <p>금융위원회<br/>금융감독원</p>   |
| <p><b>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한 점 등을 노린 범죄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보안수준 강화 방안이 필요</li> </ul>   | <p>금융위원회</p>             |
| <p><b>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금융거래 증대에 따른 은행들의 점포폐쇄로 인한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방안</li> </ul>  | <p>금융위원회</p>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li> <li>•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환수 방안 마련 필요</li> </ul>   | <p>금융위원회</p>                                   |
| <p><b>보험사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IFRS17 적용을 받게 되는 보험사들이 금년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 (실적 부풀리기 의혹)</li> </ul>   | <p>금융위원회</p>                                   |
| <p><b>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 제정 논의의 명확한 방향성 상실</li> <li>•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중복 개입 및 관련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의 문제 가능성 발생 우려</li> </ul>   | <p>공정거래위원회</p>                                 |
| <p><b>유럽 DMA의 시행에 따른 우리 경쟁법의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MA의 시행에 따라 DMA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의 표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여부와 우리나라 경쟁법에 미칠 영향</li> </ul>  | <p>공정거래위원회</p>                                 |
| <p><b>「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추정 입증 개선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기술력이 집적된 제조물의 경우 결함 추정의 요건인 통상적으로 결함 외 다른 외 부적 원인이 개입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음</li> <li>•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li> </ul>   | <p>공정거래위원회<br/>법무부<br/>자동차 제조업자<br/>및 수입업자</p> |
| <p><b>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 수단 보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의 수와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른바 '자동화된 결정(automated decisionmaking)')의 수가 증가 (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면접이나 신원확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li> <li>• 자동화된 결정을 통한 차별, 불공정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li> </ul> | <p>개인정보보호위원회</p>                               |
| <p><b>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자 형태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을 쉽게 식별하고 모방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li> </ul>   | <p>개인정보보호위원회</p>                               |



## ③ 기획재정위원회

**키워드** 대규모 세수 결손, 재정준칙,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 횡재세,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국세수입 추계정합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진도율 부진에 따라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세수결손은 09년 15조1000억원이었음)</li> <li>• 추경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방향의 수정 필요</li> </ul>             | 기획재정부    |
| <p><b>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기준 국가채무 금액이 1,000조를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필요</li> </ul>           | 기획재정부    |
| <p><b>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공급망 블록화 및 재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新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 강화 기조로, 글로벌 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블록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공급망 위험을 파악하고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li> </ul> | 기획재정부    |
| <p><b>법인세제 개편 -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세수효과, 법인세율 인하, 경제상황, 재정소요, 국제동향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법인세법 개편 방안 마련</li> </ul>   | 기획재정부    |
| <p><b>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도입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지방의 경우 낮은 세율)</li> </ul>   | 기획재정부    |
| <p><b>횡재세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사(국제 오일가 변동 이익)와 은행(금리인상에 따른 이익) 대상으로 횡재세 부과</li> </ul>  | 기획재정부    |
| <p><b>부가가치세 세율인상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li> </ul>               | 기획재정부    |
| <p><b>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협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지원 확대</li> </ul>                        | 기획재정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객수수료(소위 '리베이트')란 면세점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의미함</li> <li>• 코로나 당시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매출액의 최대 40%내외)하여 면세점 간 출혈쟁, 한국 면세업계 평판 훼손, 중소면세점 경쟁력 약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 중</li> </ul> | 관세청      |

## ④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키워드** 사이버 침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생성형 인공지능, 포털뉴스 알고리즘, 가짜 뉴스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 대다수가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있지 않는 등 신고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li> </u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p><b>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기기는 보안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li> <li>• 현재 IoT 보안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IoT 보안인증 유형·분야별 인증 편차도 큰 상황임</li> </u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p><b>사이버 10만 인재 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위한 일부 사업의 2023년도 교육 예정 인원이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 수립 당시 계획 인원보다 축소됨</li> </u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p><b>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플랫폼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환경이 미흡함.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li> </u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p><b>5G 28GHz 활용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 3사가 28GHz 기지국 장치를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만큼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와 LGU+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2023년 5월에는 S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li> <li>•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등 '새 멤버'를 찾는 중</li> </ul>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인공지능 규제 정책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이 일상에 널리 사용되고 점점 더 중요한 결정과 업무 수행에 활용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li> <li>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인간의 편견·차별이 재생산되거나, 금융·채용·의료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도출한 이유를 제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
| <p><b>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거대 자본력을 기반으로 콘텐츠 투자를 늘려 독점적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으나 국내 OTT 플랫폼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원 필요</li> </ul>   |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
| <p><b>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적으로 LLM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세계 4대 국가 중 하나로 생성형 AI 육성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검토 가능</li> <li>대기업의 LLM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생성형 AI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LLM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확대</li> </ul>                                    |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
| <p><b>방송분야 비정규직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메라, 영상, 조명, 미술, 편집, 성우, 작가, 설비, 통신 등 방송분야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낮은 임금', '4대 보험 미적용',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서면 계약서 미작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li> <li>실태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업무에 비하여 지급 받는 보수가 적다고 응답하였으며, 임금 체불 경험을 다수가 겪은 것으로 조사됨</li> </ul>   | <p>방송통신위원회</p>   |
| <p><b>포털뉴스의 공정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털뉴스의 알고리즘 공정성,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 왜곡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li> </ul>   | <p>방송통신위원회</p>   |
| <p><b>온라인 가짜뉴스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댓글,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선동과 여론 왜곡에 이용되기도 함. 특히 선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민주적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li> </ul>   | <p>방송통신위원회</p>   |
| <p><b>미디어플랫폼 역차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을 매개로 한 디지털 경제하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국내외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 됨 (온라인 콘텐츠 심의, 망사용료 지급, 이용자 보호 등)</li> </ul>   | <p>방송통신위원회</p>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b>인터넷 자율규제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인터넷 자율규제의 초점이 가짜뉴스에 맞추어 있으며,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련한 대응방안 모색 등 개선이 필요</li> </ul> | 방송통신위원회  |
| <b>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사이트 중 신속한 접속차단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히 접속차단할 수 있는 간소화 방안 필요</li> </ul>            | 방송통신위원회  |

## ⑤ 행정안전위원회

**키워드**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새만금 잼버리, 편의점 폭리, 지역자원시설세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b>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마을금고 내 횡령 및 배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과엄격한 관리·강화 방안</li> <li>•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li> </ul>   | 행정안전부<br>새마을금고            |
| <b>새만금 잼버리 운영 파행 및 편의점 바가지 요금 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에 1800억원이 넘는 농지관리기금 사용</li> <li>•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내 편의점 '바가지요금' 논란</li> </ul>   | 행정안전부<br>편의점 입점업체<br>전라북도 |
| <b>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라는 점에서 환경과세로서 부족한 면이 있음</li> <li>•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산업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과 직·간접적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li> </ul> | 행정안전부                     |

## 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공급망 안정화, EU CBAM, ESG, 기술유출 방지, 소상공인 상생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p><b>EU CBAM 도입 확정에 따른 산업계 대응전략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식 발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6개 업종에 우선 적용</li> <li>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EU 수출기업에 대해 영향</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p><b>ESG 경영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맞춤형 대응 지원 : 기업 규모, 업종, 현재 ESG 경영을 추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p><b>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한 기업공개(IPO) 후 특례상장 후 매출 미발생, 영업손실 누적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li> <li>기술특례상장에 편중된 바이오산업 회수(Exit)시장은 역설적으로 신규 바이오혁신기업의 창업과 신기술 수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li> </ul>  | 산업통상자원부<br>중소벤처기업부 |
| <p><b>기술유출(탈취)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방안 검토</li> </ul>  | 산업통상자원부<br>중소벤처기업부 |
| <p><b>제3자·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방안</li> <li>PPA는 RE100 '24/7 CFE'(Carbon-free Energy, 일명 'CF100')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요한 이행 수단이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요 전력거래방식으로, 제도의 활성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대미 철강수출 쿼터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쿼터(연 263만 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우리는 2018년 5월부터 국내 업체별로 물량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운영 중</li> <li>우리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기본쿼터(90%)와 개방쿼터(5%) 외에 추가적으로 공용쿼터(5%)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p><b>소상공인 에너지 이용 비용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li>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 또는 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li> </ul>                   | 중소벤처기업부  |

## ⑦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의료계 직역분쟁,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마이헬스웨이, 비대면 진료, 온라인 약국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 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이 지속 되다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대안)은 재의·부결</li> <li>간호계는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li> </ul> | 보건복지부    |
| <p><b>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조관리 책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던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의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제조 관리 책임 논란</li> </ul>  | 보건복지부    |
| <p><b>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1,000명이 넘는 진료지원인 (Physician Assistant, PA)에 대한 제도적 운영 방안 검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등)</li> </ul>                               | 보건복지부    |
| <p><b>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진료를 지속가능하게 운용할 수 있는 법·제도화 방안</li> </ul>  | 보건복지부    |
| <p><b>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정부 혁신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인 ‘마이데이터’ 의료분야 활성화 방안</li> </ul>   | 보건복지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b>OTT 콘텐츠의 흡연·음주장면 노출 문제 규제 필요성</b><br>• OTT 규모가 커지면서 공중파 방송 못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등의 흡연 과 음주조장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
| <b>온라인 의약품 구매 및 배송</b><br>• 온라인 약국 도입에 관한 합의 및 단계적 방안  | 보건복지부    |
| <b>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b><br>• 희귀질환 약제에 대한 문제는 품목허가보다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으로, 희귀난치성치료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건복지부    |
| <b>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b><br>• 제약업계는 임상시험 실태조사 지적사항이 누적된 블랙리스트 연구자들을 공개 (연구자 리스트 관리)  | 보건복지부    |
| <b>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b><br>• 마약류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또는 필요시 의무화 하는 방안 논의<br>•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  | 보건복지부    |

## ⑧ 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건강영향조사,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정년연장, 고령자 계속 고용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b>건강영향조사 신뢰성 논란</b><br>• 최근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br>• 2023년 5월에 정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암발생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논란 | 환경부      |
| <b>국내 가전 대기업의 계열사 임금체불 사태</b><br>• 국내 가전 대기업인 D사의 그룹 계열사 퇴직자 240명과 재직자 156명의 임금, 약 400억 원의 체불 사태 책임 및 해결 방안                                    | 고용노동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중대재해 사고 재발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사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으로 최다 사망사고 발생</li> <li>중대재해 사고 반복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보상과 대책 방안 필요</li> <li>식품제조 S사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책임 추궁</li> </ul> | 고용노동부    |
| <p><b>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회용 플라스틱 및 다회용기 등에 대한 다회용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li> <li>플라스틱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통한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li> </ul>   | 환경부      |
| <p><b>포괄임금제 관련 현황 및 쟁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발생, 제도 개선 필요</li> </ul>   | 고용노동부    |
| <p><b>정년 연장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활력 저하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정년 연장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li> <li>한편, 2033년부터 국민 전체의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될 예정으로, 현행 60세 정년제가 지속되는 경우 최소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li> </ul>        | 고용노동부    |

⑨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철근 누락,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이륜자동차 번호판, 실외이동로봇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L공사와 G 건설사</li> <li>아파트 전반에 걸친 철근 누락 사태와 총체적 부실 원인 및 책임 소재, 피해자 보상 및 대책, 향후 재발방지 방안 등</li> </ul> | 국토교통부<br>관련 공사 및 기업<br>인천시 |
| <p><b>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공시가격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검증절차의 법제화 고려</li> </ul>  | 국토교통부                      |



| 쟁점 및 문제점   | 관련 부처/기관     |
|--|--------------|
| <p><b>이륜자동차 전면(前面) 번호판 부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와 이륜자동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불법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li> <li>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주로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후면에 있어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li> </ul>   | <p>국토교통부</p> |
| <p><b>친환경자동차 정비 인력 전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비기술 역시 이에 맞추어 관련 기술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li> <li>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경우 정비사의 전문성 부족 및 관련 검사장비의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정비가 가능한 업체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현실</li> </ul>  | <p>국토교통부</p> |
| <p><b>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1월 1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교환·환불 중재 사례는 총 2,066건이고, 이 중 판정 종료된 건은 262건이며, 중재 결과 교환·환불로 판정된 사례는 13건에 불과</li> <li>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이 까다로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교환·환불이 쉽지 않고,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도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로, 동 제도를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성이 있음</li> </ul> | <p>국토교통부</p> |
| <p><b>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약화는 쇼핑·진료·교육 등의 일상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물론이고, 지방소멸을 가속시킬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li> </ul>  | <p>국토교통부</p> |
| <p><b>실외이동로봇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이 보도에서 보행자와 같은 법적 지위로 이동하는 만큼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처리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li> <li>또한 실외이동로봇의 현실적 활용은 화물 운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므로, 로봇 기반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법적 정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li> </ul>  | <p>국토교통부</p> |

##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이강민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



장재형 사무사



구기성 고문



김동석 전문위원



최준영 전문위원



윤여훈 전문위원